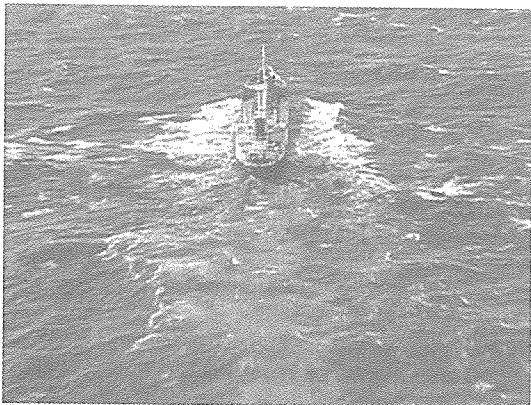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 '인상' 압박

양돈농가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 필요
해양배출업체 비용인상, 분뇨 해양배출 더 어려울 듯



▲ 최근 해양배출업체들이 내년을 기해 또 다시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양배출업체들이 내년을 기해 또 다시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또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이 더욱 불가피해졌다.

축분 해양배출 비용 또 '인상'

최근 해양배출업체들이 내년 1월을 기해 또 다시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양돈농가의 해양배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정종극 이천시부장은 “인상폭은 해양배출업체의 처리비용만 톤당 3천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가격 인상률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재철 성주지부장은 성주지역의 한 양돈농가 역시 “가축분뇨 톤당 해양배출 처리비용이 17,000원이었는데 21,000원으로 작년대비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부담이 커졌는데, 해양배출업체들이 내년에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양배출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의 해양배출량 감축방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양돈인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양돈농가들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양돈농가의 톤당 분뇨처리 비용이 평균 20~30% 인상된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인상되면서 해양배출에 대한 농가의 경영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가축분뇨 처리비용(운임제외)은 지난 '05년 해양경찰청의 해양배출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최고 80%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해양배출업체들이 이 같이 비용을 인상하게 된



〈폐기를 배출 해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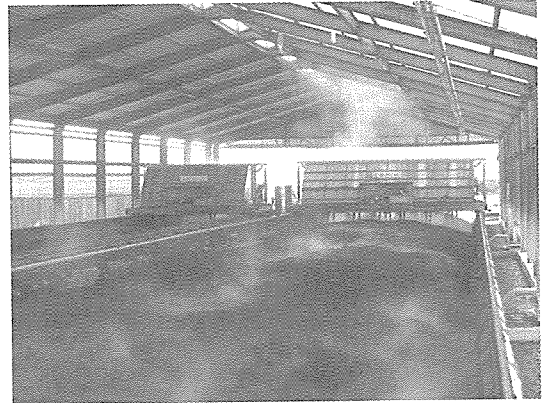
데는 정부에서 해양배출량을 매년 감축시켜 2012년부터 중단키로 했기 때문에 배출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인건비와 유류대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의지 재차 확인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해양투기업계와 양돈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배출 관련 협의회를 갖은 자리에서 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경은 이날 회의에서 보다 효율적인 해양배출 감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당초 마련된 감축일정이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축분뇨 해양배출물량이 10월 현재 전년 동기 보다는 다소 줄기는 했지만 올해 감축비율에



▲ 해양배출 중단에 맞춰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통한 해법 마련이 보다 절실해진 가운데 양돈농가들의 체계적인 감축 노력이 요구된다.

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돈농가 해양배출 중단 대비해야

정부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중단키로 한 시점이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해양배출업체의 비용 인상이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압박하면서 해양배출 중단에 대한 위기의식도 앞당겨지고 있다. 양돈농가에서는 해양배출량 감축 및 중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해양배출 중단 시기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돈협회 여성성 창녕지부장은 “올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비용이 대폭 인상될 방침이었으나 도협의회 차원에서 정당한 인상 사유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상을 감축시켰다”고 밝히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회원농가의 경우 100% 분뇨자원화를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단계적 감축 적극 추진 양돈협, 해양배출 중단 대비 감축계획안 마련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2012년부터 전면 중단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양돈협회는 향후 5년 밖에 남지 않은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해 양돈농가 해양배출량의 단계적 감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농림부가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을 2006년에 260만톤, 2007년 220만톤, 2008년 170만톤, 2009년 120만톤, 2010년 80만톤, 2011년 40만톤, 2012년 0톤 등 단계적인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어, 양돈협회는 분뇨 자원화를 통한 해양배출량 저감 및 양돈농가 계도, 홍보 계획안을 마련했다.

양돈협회는 분뇨 해양배출량을 2008년까지 해수부의 해양배출 허용량의 28% 수준을 유지한 후 2009년부터 감축 폭을 확대해 2012년에 전면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분뇨 자원화 확대

를 통해 해양배출량을 감축키로 했다. 우선 경종농가의 액비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와 액비살포 조인식을 개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경종농가 생산자단체와의 조인식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작목반과 지역 액비유통센터의 액비살포 조인식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국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를 무료 또는 유료로 살포해준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경종농가의 액비 사용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안내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양돈농가에게 배포하는 한편, 양돈협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양배출 감축 및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을 적극 홍보·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 해양배출 동물 털 5cm 미만 단속제외 추진 •

해양경찰청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배출 폐기물 이물질 점검지침에 동물의 털 길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하수처리장 및 양돈농가에서 제거가 곤란한 짧은 머리카락과 동물의 털에 대한 점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행 이물질 점검지침에 동물의 털 길이를 추가키로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이

물질 점검지침 개정안에 '머리카락 및 동물의 털은 길이 5cm 이상이 제거대상'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면, 5cm 미만의 털은 단속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현행 이물질 점검지침에는 여과망(2.36mm)을 가진 원통형 점검기구로 일정부피를 여과해 이물질을 확인하고, 확산식 처리 폐기물의 경우에는 머리카락과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 대상기준은 5개/10ℓ 이상이다. **양돈**